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정권

전 현 준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2-05

2월 16일은 작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70회 생일이다. 금번 생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첫 번째이면서 ‘꺼어지는 해’여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기념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것만 종합해 보면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생론 도입, 영생탑 건립, 김정일 훈장 제정, 광명성절 지정, 기념주화 발행 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일성 절대화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김일성은 이미 사망 전부터 거의 완벽한 절대화가 달성되었고 김정일 또한 권력 장악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 우상화 조치를 천천히 해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후계자 김정은은 후계 수업 기간이 짧아 국정경험이 일천하고 최고 엘리트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과 핵심 보좌진들은 김정일 절대화와 이의 정치적 활용을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절대화를 통해 그가 위대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근거로 ‘위대한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매우 정당했다는 정치적 합리화 논리를 뒷받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 절대화를 통한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논리를 편 것과 같다. 사실 북한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이처럼 인위적인 우상화 작업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권력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강력한 정치사회

적 통제는 물론 대안세력 부재와 저급한 민도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권력층은 아무래도 불안한 모양이다. 따라서 북한 핵심 권력층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성대하게 지낸 후 김정일의 사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첫째, 김일성 주체혁명 위업은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 장례기간에 김정일 유훈 통치를 강조하고 주체혁명위업 계승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령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지속될 것이다. 생존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주체노선을 확실히 한 바 있다. 김정은도 금명간에 핵심층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장 안전한 ‘경로 의존적’ 사상 기초를 담은 글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정은에 대한 절대화와 카리스마 부여는 김정은 권력이 안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식 이후 100일째인 10월 16일 ‘100일 중앙추모회’에 나타났지만, 김정은은 12월 28일 영결식 이후 4일 만인 2012년 1월 1일 ‘근위서울 류경수제105탱크사단’을 현지지도하였다. 군 중시 정책의 증거이다. 그 보은으로 리영호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군부 엘리트들은 ‘집단보좌체제’를 구성하여 장성택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야심’을 품지 못하도록 김정은을 결사옹위할 것이다. 2월 9일 리영호 등 고위 관료 132명에게 김정일 훈장을 수여한 바와 같이 충성분자에게는 각종 배려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할 것이다. 김정은은 ‘김일성화신론’에 입각한 인덕정치를 한손에, 강력한 탈북자 단속과 사회통제를 다른 한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셋째,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1월 16일 김일성의 인척으로서 북한 최고의 성분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이 “다른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사실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부친의 상중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등 각종 개방관련 법을 공포하고 2월 23일에는 제3차 북미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과거의 사례로 보아 북미간에 유용한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1개월만인 1994년 8월 10일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10월 21일에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넷째, 대남 정책은 당분간 강경할 것이다. 남한의 김정일 조문 불허를 이유로 상중불가 방침을 정한 북한은 남한의 차기정권 등장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비대위’까지 모두 대북 유연성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4년부터 등장한 ‘동토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가장 잘 규정한 용어이다. 물론 현재는 동토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지만 왕국은 그대로이다. 그러나 토대인 동토가 녹기 시작한다는 것은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진 왕국도 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갓 태어난 김정은 정권에게 보내는 충언은 ‘개방’이 거북스러우면 ‘국제화’를 속히 시현하는 것이 정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주변국들도 동토를 녹이는 것은 ‘차가운(cold)’ 수단이 아니라 ‘뜨거운(hot)’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